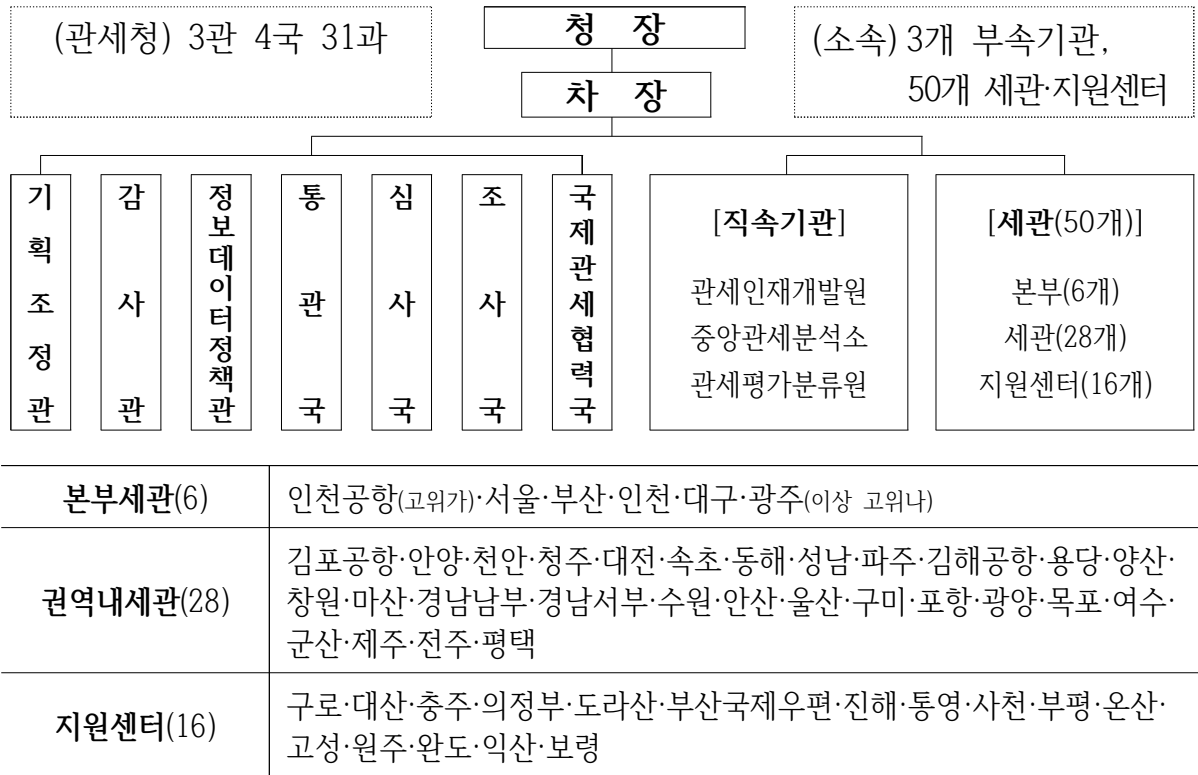

관세청 업무보고

2025. 12. 11.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

2 인원 현황

구 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
합계	정 원	5,391	1	15	13	59	41	277	4,574	411
	현 원	5,265	1	14	14	26	68	303	4,434	405
본부	정 원	360	1	8	7	18	20	72	231	3
	현 원	414	1	8	8	5	28	81	280	3
소속 기관	정 원	5,031	0	7	6	41	21	205	4,343	408
	현 원	4,851	-	6	6	21	40	222	4,154	402

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 감 (B-A)	(B-A)/A
계	658,250	689,932	31,682	4.8
인건비	357,761	373,410	15,649	4.4
기본경비	35,333	35,831	498	1.4
주요사업비	265,156	280,691	15,535	5.9

I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【'25년 성과】

□ 미 관세정책 총력 대응체계 구축

- 자체 「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(3.28~)」 중심으로 관세 전문성, 협력 채널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 관세정책에 대응

〈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구성 〉 ※ 본부장 : 관세청장

- ①(기업지원단) 美 관세청 협력 및 실무정보 확보, HS·원산지심사·통계수요 대응 지원
- ②(위험점검단) 원산지표시 점검, 특혜원산지 기획 검증, 불공정수입 유통이력조사
- ③(무역안보특별조사단) 국산둔갑 우회수출·전략물자·기술유출 단속, 공급망 위험관리

- 국산둔갑 우회수출, 전략물자·기술 유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차단*하고, 대미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산지·품목분류 지원 강화

* (우회수출) 26건, 3,834억 원 // (전략물자) 30건, 1,523억 원 적발('25.10월 기준)

□ 수출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기업 친화적으로 보세가공제도 요건과 과세방식을 개편하고, 조선·방산 등 주력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*

*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(15km→30km), 중량 단위 거래물품 분할·합병 허용

- 핵심 K-수출품목으로 부상한 뷰티·푸드산업에 대하여 수출 지원을 강화*하고, 해상 역직구 수출 통로를 일본까지 확장**

*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(8종→1종),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발간 등

** 역직구 최대 시장인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을 위한 일본 관세당국과 합의 등 성사('25.10월)

- 전략적 관세외교 활동으로 8천억 원 상당 한-인도 품목분류 분쟁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해외통관애로 적극 해소*

* 통관애로 접수건수 19% 감소(121건→98건), 해소금액 17% 증가(450억 원→528억 원)

□ 마약·총기류 등 위해물품 단속을 통한 국민안전 수호

- 국내 마약류 전체 적발량의 **78.4%**(최근 5년 평균)*를 국경에서 차단하였으며, 총기·실탄 등 약 2만 점 가량의 **안보위해물품****을 적발

* 연 평균 마약 압수량 720kg // ** (25.10월) 총기(타정총 포함)·실탄 등 7,777건·17,939점 적발

□ 안전한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

- 총기·폭발물 등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*하고, 각국 정상과 대표단에게는 신속한 **통관 편의**를 제공**하여 APEC 안전개최 지원

* 전국 34개 세관 대테러 대응팀 구성·운영(423명), 대테러 종합상황실 운영(24시간)

** 김해, 인천공항, 포항경주공항 등 APEC 통관지원반 편성, 전용 검사대 운영 등

□ 국가 재정수요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

- 관세·부가가치세 등 약 **62.9조 원 징수**(예산 69.8조원 대비 90.1%, 11월 기준)

※ 총 국세 대비 비중 : ('23년) 19.8% → ('24년) 19.9% → ('25년) 18.8%

- 납세자 친화적인 관세조사 체계(3단계 관리*)를 도입하고, 악성 **탈세 행위와 체납**에 대해서는 **단호히 대처****

* [1단계] 납세도움정보 제공→(미이행)→[2단계] 세액심사→(미이행)→[3단계] 관세조사

** [관세조사 추정액] ('24.10월) 2,650억 원 → ('25.10월) 4,298억 원(62%↑)

【보완점】

- **한-미 관세협상 타결**(10.29)로 변경된 교역규칙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, **EU CBAM**(탄소국경조정제도) 등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한 적응력 필요

※ 한-미 FTA는 대미수출(금액)의 약 54%에 적용(25.10월), 10.29. 타결내용은 모든 대미 수출에 적용

- **조선, 반도체, K-뷰티** 등 핵심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, 우회덤핑·공급망 위기 등 **무역안보 리스크 대응체계** 보강

- **위해물품**(마약·총기류 등) 반입, **신종 탈세** 등 불법행위 대응에 AI·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국경단계 위험관리 역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

비전

시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

추진
방향

- ◇ **통상환경 변화에 기업이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안보침해 엄정 단속**
- ◇ **15대 수출 주력품목과 K-소비재 등 유망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조기 진입 지원**
- ◇ **사회안전 위협 마약·테러 행위와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·무역거래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건강과 대외질서 수호**
- ◇ **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 확보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,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을 가속화**

중점
추진
과제

- 1 **新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출기업 지원**
- 2 **무역안보 침해행위 단속기반 강화**
- 3 **초국가범죄 대응 무역범죄 수사체계 구축**
- 4 **마약·총기류 등 위해물품 원천 차단**
- 5 **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**
- 6 **악의적 체납·탈세 행위 엄단**
- 7 **관세행정 SI 대전환 본격 추진**

Ⅲ. 중점 추진과제

① 新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출기업 지원

- 한·미 관세협상 타결 후 미측의 차등적 관세체계 대응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*·품목번호 관리를 집중 지원하고, FTA특혜 활용 강화조치 병행
 - * 美 관세청은 '실질적 변형기준'(사례 중심)으로 비특혜 원산지를 판정하여 예측가능성 ↓
 - 한-미 관세청장 회의('26.1월)* 계기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, 美 관세청 초청 관세정책 설명회(K-Customs Week) 개최 추진
 - * 美 관세청 청장(Rodney Scott) 부임('25.6월) 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 개최
 - 美 관세청의 원산지판정 사례와 미측 품목번호 정보를 제공하고, 사후 원산지검증 대비 유관기관(산업부 등)과 협력하여 검증대응 지원
 - 아세안, 중국 등의 관세당국과 FTA 협의체*를 설치하여 특혜 원산지 기준 이견 해소 등 국내산업 FTA 특혜적용에 필요한 현안을 신속 처리
 - * 「FTA관세법」 제33조(상호협력)에 근거한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로 FTA 이행현안 신속히 해결
- EU CBAM 시행('26.1.)에 대비, CBAM 당국과 우리기업의 탄소배출 관리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 협의* 및 전담 통관애로 해소팀 신설 추진
 - * ㉠ 제조단계별 탄소배출량을 누적·산정하는 탄소관리 프로그램(CBAM-PASS) 설계의 적절성
 - 대EU 수출기업용 탄소배출 관리프로그램을 무료보급하고, 원산지관리 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해 '한국형 CBAM 대응 프로그램' 표준화
- 핵심·유망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 산업별 특성에 맞는 관세·물류 규제혁신 등 지원책 제공

〈 산업별 관세·물류 규제 혁신 방안 〉

반도체·바이오(경인·충부권)	▶ "첨단연구소"에 보세특허 부여 → 시제품·원재료 반출입절차 간소화
조선(동남권)	▶ 수주 증가에 따라 작업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외 작업 허용
K-뷰티·푸드(대경·서남권)	▶ 풀필먼트 활용 지원, 주요 품목(김치·라면) 국제 HS코드 신설 추진

② 무역안보 침해행위 단속기반 강화 (국정과제 37)

- 국산둔갑 우회수출, 우회덤핑, 전략물자 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 급증*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안보 수사·조사 체계 구축
 - * 무역안보 침해범죄 적발규모(억 원) : ('23년) 1,495 → ('24년) 2,262 → ('25.10월) 5,357
 - 무역안보 수사기능(전담조직, '26년 신설)을 강화하고,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무역안보 침해행위까지 엄단*
 - * ㉠ 美 산업안보국과의 정보공유·공조수사로 美 금융제재 실행 및 현지처벌 유도
 -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증가, 우회덤핑 범위 확대에 따라 관세청의 보세구역 관리권한과 물품검사 전문성을 활용한 우회덤핑 조사 추진
 - ※ 철강업계('25.7월): "우회덤핑 범위확대에 따라 제3국 위장수입에 대한 관세청 단속활동 필요"
- 원재료 수급불안정 등 위기 조기탐지를 위해 수입량과 함께 보세창고 비축량·수출량까지도 포괄 분석하도록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*
 - * 활용데이터 : 수입데이터 + "화물정보(보세창고 비축량 파악), 수출데이터(수출 영향도 분석)"

③ 초국가범죄 대응 무역범죄 수사체계 구축 (국정과제 37)

- 초국가범죄 자금고리*를 끊기위한 불법외환거래 수사 강화
 - * ㉠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을 가상자산(테더, 약 50억 원) 거래로 자금세탁한 사례 적발('25.11. 송치)
 - 외환거래 수사대상을 도박·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, 해외 ATM 인출내역·위조화폐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 강화
- 형사사법체계 개편과정에서 무역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역범죄 수사범위 재설계(연계범죄 포함), 수사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
 - 무역거래와 관련된 보조금 편취, 해외 재산은닉, 기업가치 왜곡 등 경제범죄까지도 책임성 있게 수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*
 - * ㉠ (보조금 편취) 수출가격 고가조작으로 실적을 부풀려 유니콘기업 선정·보조금 수령
 - 무역범죄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「관세수사발전자문위원회」*를 설치하고, 사건별 절차적법성을 점검하는 내부 인권보호팀 신설
 - * 법률·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(수사절차 적법성과 피의자 인권보호 중심 자문)

4 마약·총기류 등 위해물품 원천 차단 (국정과제 37)

□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반입경로별 원천 차단막을 설치하는 ‘새로운 국경 마약 단속체계’ 구축

※ 최근 5년 마약적발량의 약 80% 국경단계 적발 → 국경단계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공급 차단책

○ 소액 특송물품*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중대 마약 밀수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송거래 제한 추진

* 최근 3년간 국경단계 마약 적발량의 약 41%가 특송통관 경로에서 적발

○ 주요 마약출발국*과 국제 수사공조를 실시하고, 항공사로부터 확보하는 승객예약자료 정확성을 제고**하여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률 향상

* 상위 10개국(태국, 베트남, 말련, 미국, 네덜란드, 캄보디아 등) → 국경단계 마약적발량의 83%

** ㉠ 자료 제출의무 있는 국내외 항공사의 제출률 제고를 위한 미제출 과태료 강화 검토

○ 특송·휴대화물 X-ray 판독 적정시간 확보 등 마약류 적발률 제고 방안*을 마련하고, 입국여행자 검사를 출국 보안검사 수준으로 강화

* ㉠ 판독시간 연장(3초→7초), 우범국발 화물 판독 이중화 배치(판독자 1인 → 2인)

○ 공항만 통관과정에서의 신속·정확한 마약수사를 위해 통관검사에 마약수사팀을 함께 투입하고, 마약사범 정보 입수 확대(국방부·식약처)

□ 테러물품·국민건강 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기관 간 공조 강화

○ 사제총기 제조위험성 차단을 위해 경찰청·정보당국과 공동대응체계*를 확립하고, 국내외플랫폼과 협업하여 타정총·모의총포 반입·유통 억제

* ㉠ 관세청이 유관기관의 사제총기 제조 고위험자 정보와 수출입정보 조합하여 우선수사대상 선별

○ 데이터 기반 통합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경관리 유관기관들이 보유 데이터를 공유,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

□ 국민안전 밀접품목 중심으로 ‘통관단계 세관장 점검품목’을 재정비*하고, 미인증 의료용품, 산업안전 위해물품**의 수입요건 회피행위 집중 단속

* 위험성, 세관장확인 빈도, 소관부처의 안전관리 협력도, 통합공고 규정 여부 등 고려

** 안전모·장갑 등 인증 미비 보호장비, 인증심사 부적합 컨베이어·사출성형기 등

5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(국정과제 37)

-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일본까지 확장*하고, 우편물 목록통관 수출에 대해 영세율 수혜 지원
 - * 중국만 시행 중, 일본은 제도 시행이 본격 성사('25.10월)된 후, 내년 1월 최초 수출 예정
- 미국 소액면세 제도 폐지('25.8월)의 대안으로 떠오른 폴필먼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
-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'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'을 개통('26.10.)하고,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모니터링* 강화
 - *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폭증, 시스템 무자격 접근 방지
- 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관세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고,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'전자적 환급양도제도*' 마련
 - *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환급금 우선지급, 구매자로부터 환급권을 전자서명 양도받아 세관에 신청

6 악의적 체납·탈세 행위 엄단

- 고액·악성 체납자를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, 기존 제재 수단*도 엄격히 적용
 - * 일정금액 이상 수입물품(특송물품·우편물 포함) 전체 통관보류·검사압류, 휴대품 100% 검사 등
- 외환 과태료·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*에 대해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조치 도입하는 방안 검토
 - * 과태료 체납 : ('20년) 106억 원 → ('24년) 750억 원, 4년 새 7배 증가
-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탈루, 상품거래의 서비스거래 위장 등 신종 탈세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관세조사 집중
 -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은 납세편의 배제, 이행강제금 도입, 불복·소송단계 신규 제출 과세자료 불인정 등 제재 확대

7 관세행정 AI 대전환 본격 추진 (국정과제 24)

- AI 관세행정의 최종목표(‘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 없는 경제국경 수호’)를 위해 수출입 안전 업무를 우선으로 AI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*
 - * 현재 관세청은 우범화물·여행자통관 등 11개 분야에 AI 위험분석·선별 모델 적용
- AI 관점에서 관세행정 업무, 시스템 전 분야의 근본적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‘AI ISP*’를 신속히 실시하여 AI 대전환 본격화
 - * (‘26.1월) ISP 착수 → (‘26.5월) AI 추진 핵심과제 조기 도출 → (‘27년) 본사업 진행
- 여행자·특송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서 심사, 우범화물 선별, X-Ray 판독을 지원해주는 ‘AI 융합 통관 영상관리 시스템*’ 등 도입 확대
 - * 마약, 총기류 등 과거 적발 데이터와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여 판독자에게 알림 제공
- 관세청 수출입데이터를 AI 리더블 형태로 전환하고, 수출입 통계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추가 개방
 - X-Ray 이미지, 관세조사·수사 보고서 등 비정형데이터를 AI 리더블 형태로 전환하여 국경위험관리 분야의 데이터 활용성 강화
 - ※ 1일 평균 수출입신고 7만2천 건, 특송통관(X-ray포함) 52만 건 축적

< 관세행정 AI 추진 로드맵 >

